

재벌이나 국민이나
재벌증세로
모두에게 기본소득

재벌이나 노동자나
삶을 위한 대안
최저임금 1만원과 5시 퇴근법

재벌이나 국민이나

**재벌증세로
모두에게 기본소득**

재벌이나 노동자나

**삶을 위한 대안
최저임금 1만원과 5시 퇴근법**



2016 총선, 노동당의 제안	4
모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연대적 노동사회)	5
빛이 아닌 소득으로 사는 삶(소득기반경제)	11
조세재정개혁	16
노동당 핵심공약이 실현된다면 내 삶엔 어떤 변화가?	18
평등선거가 복지다(정치·선거제도 개혁)	19
핵 없는 안전한 나라(탈핵·생태 전환)	22
한반도, 대결에서 평화로(한반도 평화)	25
공공성 강화	28
청년	33
교육	35
여성	37
성정치	41
장애인	43
문화예술	45
풀뿌리	47
중소상공인 보호	48
농업·농민	50

저성장 위기의 시대, 경제·사회체제 전환을 위한 노동당의 제안



모두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



재벌 증세



노동시간 단축
정규직 고용



기본복지
공공서비스 확충



저성장 위기의 시대



재벌 중심의
수출주도성장



부채로
지탱해온 내수



OECD 최악의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



간접세중심
저부담 조세체제



1200조
가계부채 위기



만성적
복지재정 부족

노동당 2016 총선공약

저성장 시대의 개막 하지만 함께 살아갈 길은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묻기 민망한 시절입니다. 수출은 절벽인데 소비도 바닥입니다. 소득은 줄고 쓸 만한 일 자리는 없고 빚은 이미 너무 무겁습니다.

정부여당은 해고를 더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더 늘려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보수야당은 비정규직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내수는 살려야 하니 복지는 조금 늘리자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20년 이상 해오던 방식 그대로 하자는 정부여당, 재벌대기업 배만 불리고 국민은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은 오늘의 위기를 낳은 원인이고 앞으로도 위기를 더 키울 뿐입니다.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다 죽게 생긴 국민들에게 보수야당의 주장은 한가하기 짝이 없는 처방입니다. 결코 현재의 위기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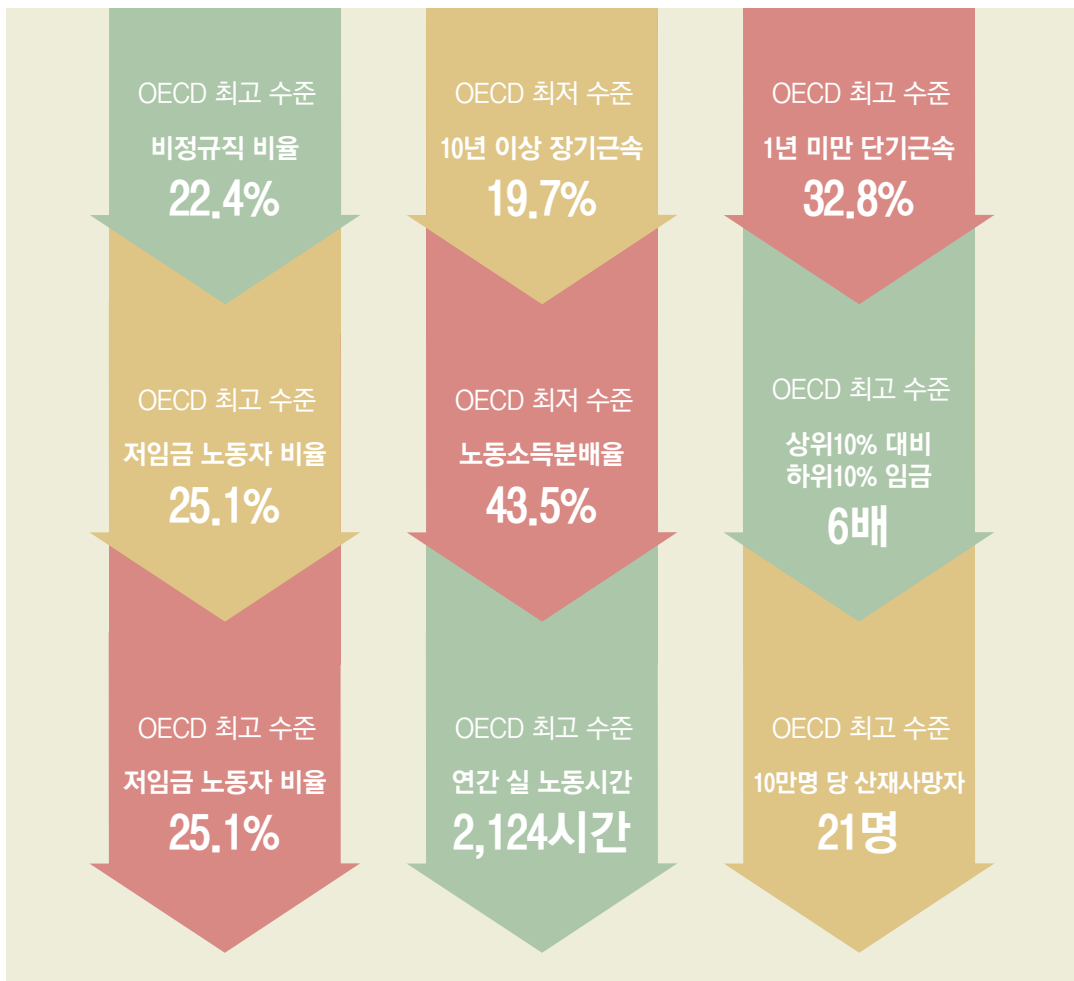
길은 있습니다.

세계 최악의 불안정 · 저임금 · 장시간 노동, 이제는 끝냅시다. 더 적은 시간을 노동하면서도 모두가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충분한 소득을 얻는 사회는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 자리를 공유합시다.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교육 의료 주거 걱정이 없도록 복지를 확충하여 위에만 고여 있는 소득을 이제는 아래로 나눠줍시다.

물론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재벌증세와 불로소득 증세를 통해 OECD 꼴찌 수준인 조세부담률 획기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재벌편만 들어온 정부여당과 보수야당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노동당이 국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노동당 2016 총선공약 올림

세계 최악의 불안정 · 저임금 · 장시간 노동체제!



노동이 지옥인 나라에서 ‘국민행복시대’는 사기입니다.

비정규직을 조금 줄이거나 차별을 시정하는 것으로 될까요?

하지만 비정규직은 더 늘어났고 정책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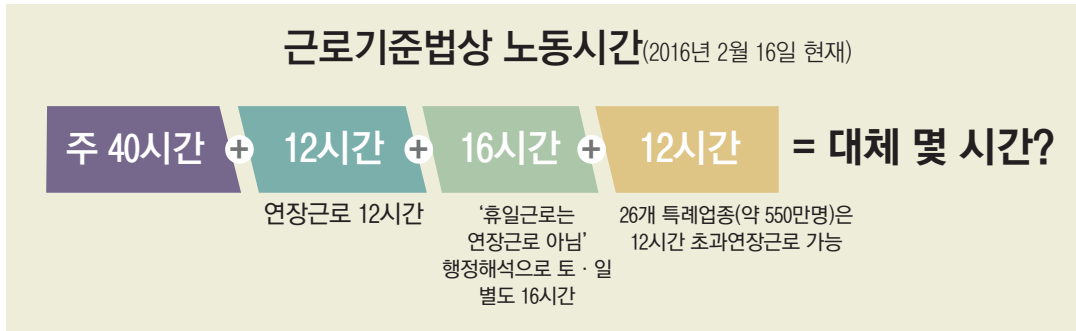
이제는 불안정 · 저임금 · 장시간 노동을 끝내야 합니다.

235만 개 정규직 일자리 만들기

저성장 시대에는 노동시간 단축만이 일자리를 만듭니다.

공약 1 노동시간 35시간 + 5시간제

- 주당 노동시간은 35시간을 상한으로 한다.
-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근무는 5시간을 상한으로 한다.
- 출산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 상한은 주 30시간으로 추가 단축한다.
- 연장근로 제한의 적용이 없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제도를 폐지한다.



공약 2 기간제법 · 파견제법 등 '평생 비정규 악법'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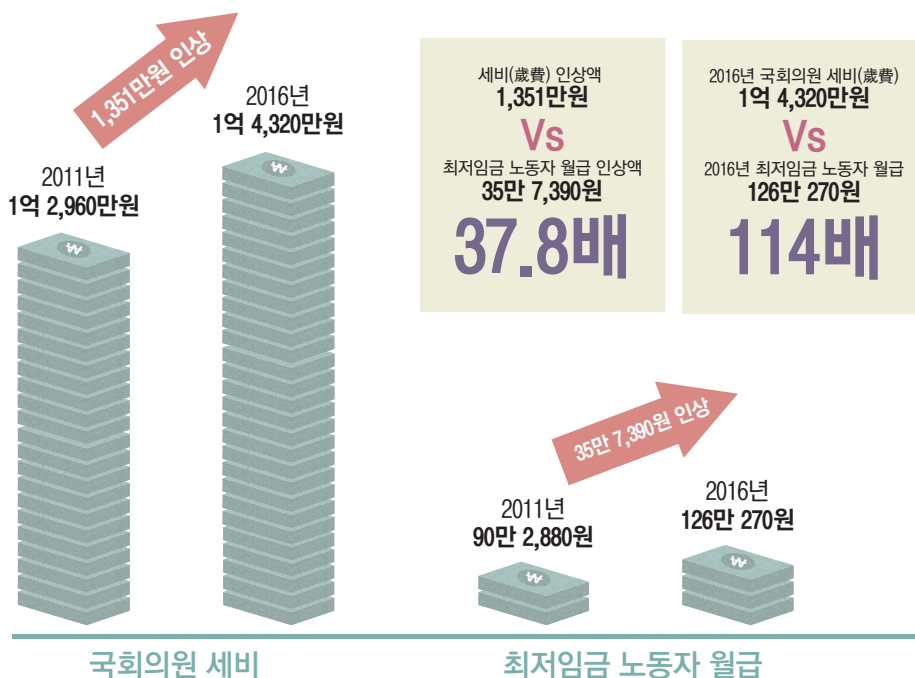
- 2년 단위 비정규 인생 만드는 기간제법 폐지
- 똑같은 일하고도 정규직 절반 임금 강요하는 파견제법 폐지
-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공약 3 주당 35시간 일하면 정규직으로

- 3개월 평균 주 35시간 일하면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 사용자에게 정규직으로 고용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동으로 정규직 노동자가 된 것으로 본다는 것.

공약 4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공유 특별법' 제정

-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 생긴 일자리는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
- 3개월 평균 주 35시간 일하면 정규직으로 간주
-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임금체계 변동 금지
- 정규직 추가 고용을 한 사용자에게 대한 지원과 위반 사용자에게 대한 처벌 규정



일한만큼 받는 임금

노동시간을 단축해도 임금은 하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약 5 최저임금 1만원 법제화

- 201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한다.
-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한다.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액수 이상으로 국회가 재심의하여 결정한다.

공약 6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 수당과 상여금 등 변동급여 중심의 임금체계를 기본급 중심으로 개편한다.
- 기본급은 총액과 현재 수준의 임금총액을 일치시킨다.

공약 7 연장근로 등 임금 가산율 인상

- 연장근로 ·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한다.
- 연장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율을 현행 100%에서 200%로 인상한다.

공약 8 통상임금에 변동급여 포함

- 통상임금에 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되도록 한다.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차휴가수당만 통상임금에서 제외

공약 9 직무성과급 도입 반대, 포괄임금약정 금지

- 성과급 대신 시간급 임금체계로 임금하락을 방지한다.
- 법정노동시간과 초과노동시간을 구분할 수 없는 포괄적인 임금약정을 금지한다.

일 · 돌봄 · 생활의 균형

공약 10 연차 유급휴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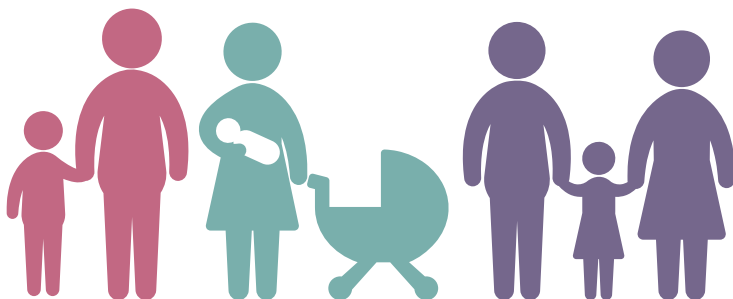
- 가산휴가를 포함한 휴가일수의 한도를 1년 최저 25일로 한다.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소멸된 휴가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보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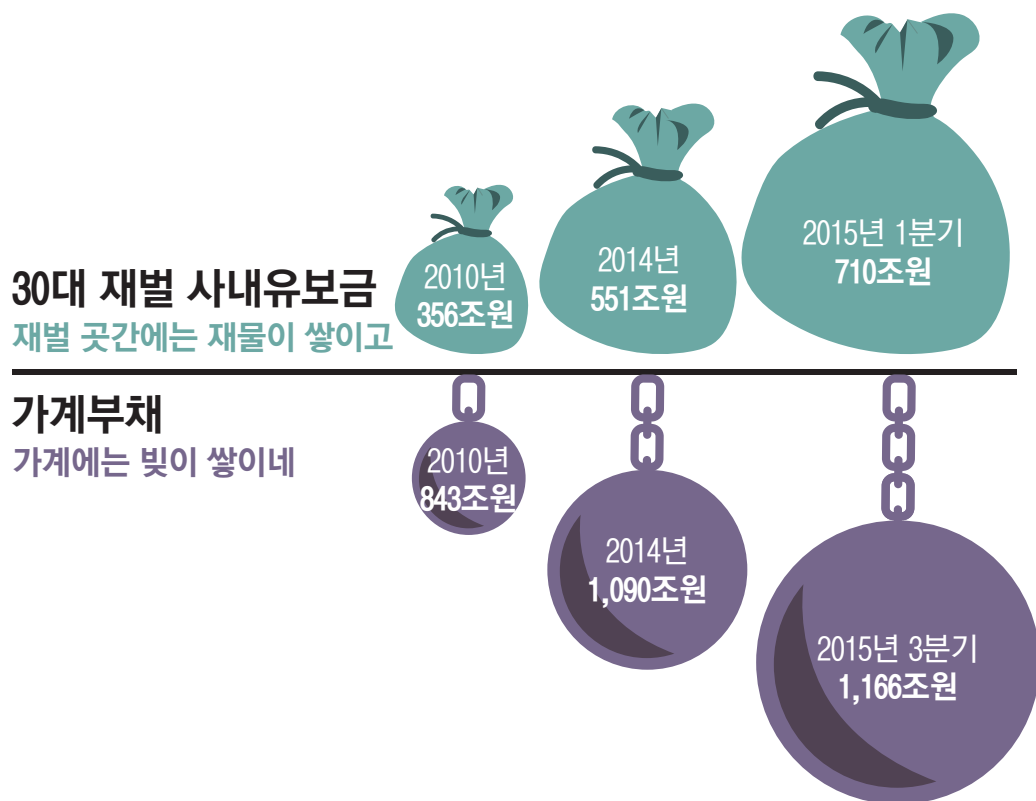
공약 11 유급 육아휴직 확대와 의무화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부나 모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최소 24주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부여한다.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고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하고,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현행은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을 통상임금의 80%로 한다.(현행 60%)

공약 12 연속 휴식시간 보장

- 하루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 1주 안에는 최소 35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저임금 비정규직은 확대되고 변변한 복지정책은 없으니

가계소득은 줄어든 수밖에요.

그런데 재벌은 노동자와 가계의 희생으로 벌어들인 돈을

고스란히 곳간에 쌓아두기만 합니다.

이제 수출절벽, 내수절벽을 걱정하는 저성장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요?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재산의 크기나 노동 유무 등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가구 단위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지급됩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실험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이나, 성남시가 시행하는 청년수당은 제한된 계층에 대한 부분적인 기본소득입니다.

노동당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전면적인 기본소득을 주장합니다. 약 167.5조 원이라는 큰 재정이 소요됩니다. OECD 국가들 평균보다 약 10%포인트 낮은 총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이상으로 올리면 재정은 마련됩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입니다. 노동당은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불로소득, 고소득에 누진 종과세하여 세금을 늘리고 재벌에게는 더 많은 부담을 지워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기본복지를 확충하자고 제안합니다.

공약 13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

- 직업 유무 등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
- 만 6~17세에게는 월 20만원을 지급
-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료를 중앙정부가 전액 책임
- 소득하위 70%에게 월 20만원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모든 국민에 대한 월 30만원 기본소득으로 대체

공약 14 농민·장애인 등에게는 추가수당 지급

-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는 월 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추가하여 지급
- 장애인에 대해서는 소득과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 근로능력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장애인 등에 대해 적정 수준의 추가 기본소득을 지급

가계부채 축소와 탕감

공약 15 이자율 최고한도 15%로 하고 대부업 특혜금리 폐지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한도(현 25%)를 15%로 인하
- 대부업 특혜금리 제도를 폐지하고 이자제한법 한도(15%)에 일치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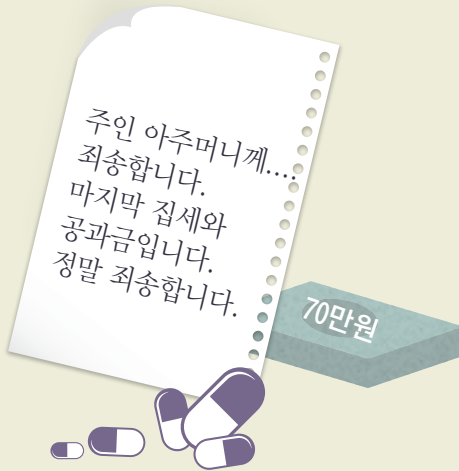
공약 16 생계형 부채 탕감과 채무조정제도 개혁

-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채무를 변제능력에 대한 심사를 거쳐 2년에 걸쳐 원금의 60~100% 수준에서 대대적으로 탕감(약 200만명이 대상자)
- 소득 없는 청년, 파산한 자영업자 등의 채무도 적극적으로 탕감
- 파산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복권 이후 채무추심행위 금지하고, 복권까지 기간을 현행 10년으로 5년으로 단축하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기본복지 확충

공약 17 의료 공공성 강화

- 62%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85%로
- 11%에 불과한 공공병상 비율을 30% 수준으로
-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공공재원(정부지원+건강보험) 비중을 현행 55%에서 75%로
- 의료민영화 관련 정책들을 전면 폐기하고 의료공급체계를 개혁해 의료공공성 강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공약 18 대학등록금 전면 무상화

- 사립형 대학을 공영형 대학 및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하고 국가책임교수제 도입
- 전문대학, 공영형 대학 및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전면 무상화

공약 19 전월세값 인상 통제와 공공임대 확대

- **전월세 전환율 상한제**: 월세 계약 또는 전세의 월세 전환시 전세 기준 임차보증금에 대해 한국은행 기준금리(현재 연 1.5%)의 2.5배 또는 연리 6% 중에서 낮은 가격을 월세의 상한으로 정한다.

예 전세보증금 2억원 아파트를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전환한다면 월세는 얼마?

$$= 1억7000만원 \times 3.75\% (1.5 \times 2.5) = 637만5000원$$

$$637만5000원 \div 12개월 = 월세 53만1250원$$

- **전세값 상한제**: 전세계약 시점의 전세보증금 인상률을 통계청 가계물가지수 상승분 또는 연리 2% 중 낮은 값으로 정한다.
- **임대계약 10년으로**: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고, 5년 경과하면 임차인에게 5년 추가계약 갱신권을 부여해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10년을 법으로 보장
-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체 주택의 20%(약 374만 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하여 저소득층, 비혼 여성, 청년 등에 대해 우선 공급

공약 20 월 정액카드로 대중교통비 50% 절감

- 주 5일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월평균 대중교통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액권 판매
- 정액권 소지자는 특정 구간 안에서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
- 버스를 단계적으로 전면 공영화

공약 21 이동통신기본료 폐지와 무료 와이파이 전국화

- 이동통신요금에서 월 1만1000원의 기본요금을 폐지 ➡ 요금인가제를 이용해 이동통신사의 폐지 유도
- 전국 시내 7만대의 공중전화박스, 야구장, 축구장 등 대량의 데이터가 발생하는 장소에 와이파이 설비를 설치해 일정 거리 안에서 데이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중전화박스를 관리하는 KT 자회사 케이씨티를 공기업화하여 추진

공약 22 영유아 보육 전액 국가책임제

- 국고보조금과 지방재정교부금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공동 재원이 드는 보육료를 전액 중앙정부 책임으로 전환
-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도 전액 국가 책임
- 보육비와 양육수당의 구분을 없애고 어린이집 이용과 무관한 아동수당으로 일원화
- 2020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50% 국공립화(현재 5.7%)

조세재정개혁

재벌증세, 자본증세, 불로소득 증세로 총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려야만 안정적인 복지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약 23 재벌 증세

-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30%로 인상
 - *대기업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없앤다.
- 금융자본보유세 신설 : 일정 규모 이상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부과해
가계부채 탕감의 재원 및 주요 은행에 대한 사회화 기금으로 사용
- 상속증여세의 비과세 감면규정 정비로 실효세율 강화하고 '기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혜택을
최대 5억 원으로 축소(현재는 200억~500억 원)
- 주식 ·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전면 과세하고 종합과세에 포함한다.
- 재벌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공약 24 불로소득 증세

- 이자 · 배당소득 과세 강화 : 이자와 배당소득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무조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
- 임대소득 과세 강화 : 임대소득 세원 파악을 강화하고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과세 한다.

공약 25 소득세 과세 강화

- 종합소득 3억원 초과에 대한 세율을 38%에서 45%로 올린다.
- 100만원 초과일 경우 이자·배당·임대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 종교인 과세 정상화

공약 26 국방예산과 토건예산 감축

- 국방예산을 GDP 대비 5%로 낮춘다(2010년 기준 8.6%)
- 국가재정에서 토건예산의 비중을 15% 수준 이하로 낮춘다.



어떻게 마련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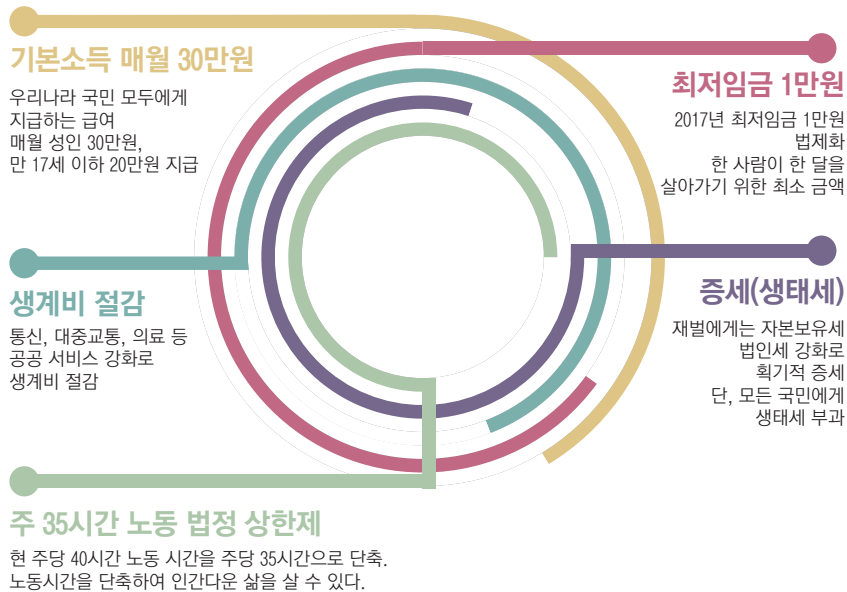
OECD 평균 이상으로 총조세부담률을 높이면 약 200조원 세수 확보!

*총조세부담률 = 세금 +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료
 *OECD 평균 총조세부담률 = GDP 대비 34.1%
 *한국의 총조세부담률 = GDP 대비 23.9%

토건예산과 국방예산 삭감으로 약 55조원 마련!

약 255조원 마련

노동당 핵심공약이 실현된다면 내 삶엔 어떤 변화가?



〈현재〉	〈노동당 핵심정책〉	〈효과〉
대기업 10년차 정규직 + 전업주부 1명 + 중학생 1명 월 노동시간 236시간 월급 480만원	기본소득 월 30만원 (만 17세 이하 20만원) 노동시간 주 35+5시간제	노동시간 감소 월 86시간 (평일 하루 3.9시간) 소득 14만원 증가
대공장 15년차 정규직 + 전업주부 1명 + 고등학생 1명 + 어머니 월 노동시간 248시간 월급 463만원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연장근로 임금가산율 2배 인상	노동시간 감소 월 76시간 (평일 하루 3.4시간) 소득 28만원 증가
중소기업정규직 + 비정규직 부부 + 초등학생 1명 월 노동시간 387시간 월급 360만원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주거비, 교통비, 의료비, 통신비 등 생계비 절감	노동시간 감소 월 86시간 (평일 하루 3.9시간) 소득 94만원 증가
전일 아르바이트 노동자 (단독 가구) 월 노동시간 172시간 월급 120만원	주35시간 이상 일하면 정규직 전환 간접세 방식 생태세 부과	노동시간 감소 월 22시간 (평일 하루 1시간) 소득 89만원 증가

* 월 노동시간 : 유급휴일 제외 실 노동시간, 비급여 노동시간 포함

전면 비례대표제 등 평등선거 구현

공약 27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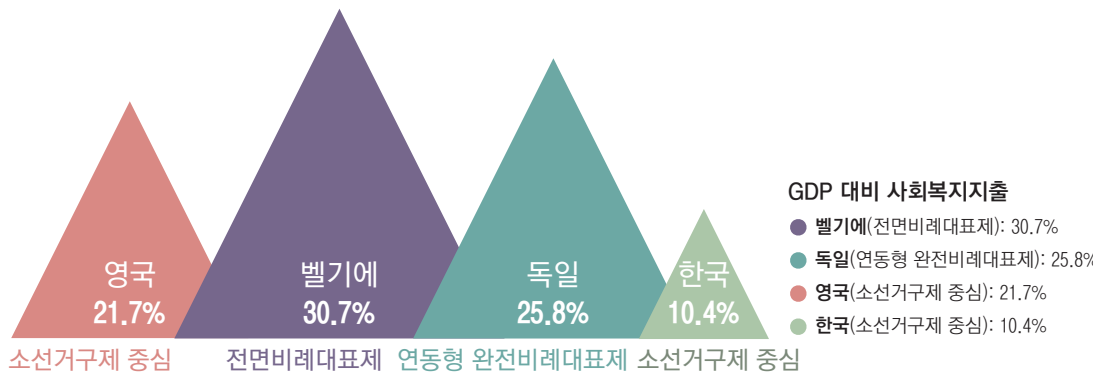
- 소선거구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국회의원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
- 완전비례대표제도 도입 가능, 이를 위해서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50:50으로 구성해야 한다.

완전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을 지역구 또는 권역별 후보와 전국 비례대표를 혼합해서 선출하더라도 정당의 전체 의석수를 그 정당의 전국득표율에 일치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완전비례대표제의 좋은 예입니다.

공약 28 결선투표제 도입

-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실질적 참정권 보장

공약 29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조정

-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춘다.
- 교육감 선거권은 만 19세에서 만 16세로 낮춘다.
-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의원 및 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춘다.
- 정당가입, 선거운동에서는 연령 제한을 없앤다.

공약 30 비정규직 등의 실질적 선거참여 보장과 비례선거운동 제한 철폐

- 투표시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선거일 유급휴가사용 권리와 위반 사업주 처벌 등 실질적 참정권 보장
- 정당 비례대표후보의 선거운동 제약을 없애고 지역구 후보와 같은 수준의 선거운동 보장

정보기관 선거 개입 차단과 정치 표현의 자유 확대

공약 31 국가정보원 폐지와 정보기관 개혁

- 선거개입, 인권유린 일삼는 국가정보원 폐지
- 국가정보원 폐지 이후 설립될 국가 정보기관의 권한과 위상
 - *수사권과 정보 및 보안 업무 행정부내 기획조정권 폐지
 - *국내보안정보는 해외정보, 대북정보 등과 관련한 정보에 한해 수집 허용
 - *국회 정보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권에 대한 거부권 폐지
- 2016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제약하는 각종 제도와 법률의 폐지 및 개혁

국고보조금제도 개혁과 전면적 선거공영제

공약 32 경상보조금제도와 선거보조금제도 개혁

-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의석수 중심으로 배분되는 현행 정당 경상보조금 제도 폐지
- 정당의 전국득표수와 후원금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

예 독일식으로 개정하여 '1표 득표당 얼마, 정당에 대한 자발적 후원금액당 얼마' 식으로 국고보조금 지급

- 득표율 10% 이상 50%, 15% 이상 100% 방식으로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제도를 전면적 선거공영제가 되도록 이보다 훨씬 낮은 기준선에서 100% 지급으로 개정

2040년까지 핵발전소 완전 폐쇄

공약 33 노후원전 폐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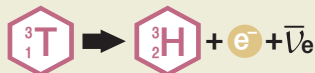
- 12개 노후원전은 수명 연장 없이 2030년까지 단계적 폐쇄
(노후원전: 고리2·3·4기, 한빛1·2기, 울진1·2기, 월성2·3·4기)
- 설계수명이 남아 있는 12개 핵발전소는 2040년까지 폐쇄
- 경주 월성1호기는 연장수명 2022년보다 빠른 2020년까지 가동중단

공약 34 2040년까지 탈원전 완성

- 신고리5·6호기, 신울진3·4호기 신규원전 추진 중단
-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선정 취소
- 원전 중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체 지속적 추구
-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



3중수소 붕괴 과정



원자력위원회는 2015년 2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3년째 가동 중단 중이던 월성1호기에 대해 2022년까지 운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환경운동단체들이 2016년 1월 월성1호기 인근 주민 40명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몸속에서 방사능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정부는 위험하지 않다고 하지만, 방사능물질에 안전한 기준치는 없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에서도 보듯,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으로 한 번의 사고가 대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공약 35 신재생 에너지 전환

- 2013년 3.8%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향상하고, 화석연료 에너지 비율을 지속적으로 축소시켜 나간다.
- 생태세를 신설해 연 5조원을 신재생에너지 전환 재정에 사용
- 대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진출을 규제하고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중심으로 지원
- 원전 탈피와 신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의 제정
-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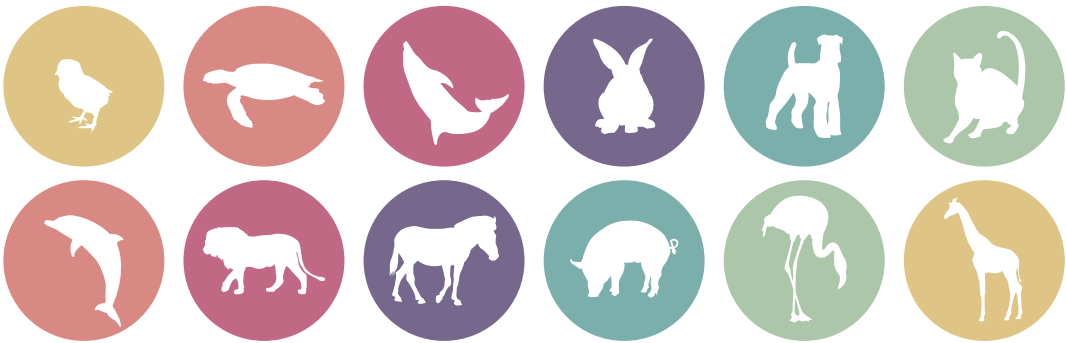
발전차액지원제도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1년 폐지됨

공약 36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 감축
- 배출권거래제도 이용한 배출권 구매 없이, 산업부문에 대한 특혜 없이 감축



동물권 존중



공약 37 헌법에 ‘자연에 대한 존중 의무’와 ‘동물보호의무’를 국가 의무로 명시

-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민법을 개정하여 동물을 생명으로 규정
- 환경소송의 원고 적격을 폭 넓게 인정하여 대리소송 및 집단소송의 형태로 ‘자연의 권리소송’이 가능하도록 한다.
-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
- 공장식 축산업 금지, 종의 특성에 맞는 축산기준 마련
-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고시 제1장 제4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고래류의 포획을 일체 금지한다.
- 반려동물 화장시설 설치 : 특별시 광역시는 구(區)별로 1개, 시군구별 1개 이상의 화장시설 설치
-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공약 38 채식인 권리 존중

- 단체급식에서 채식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식료품에 비건표시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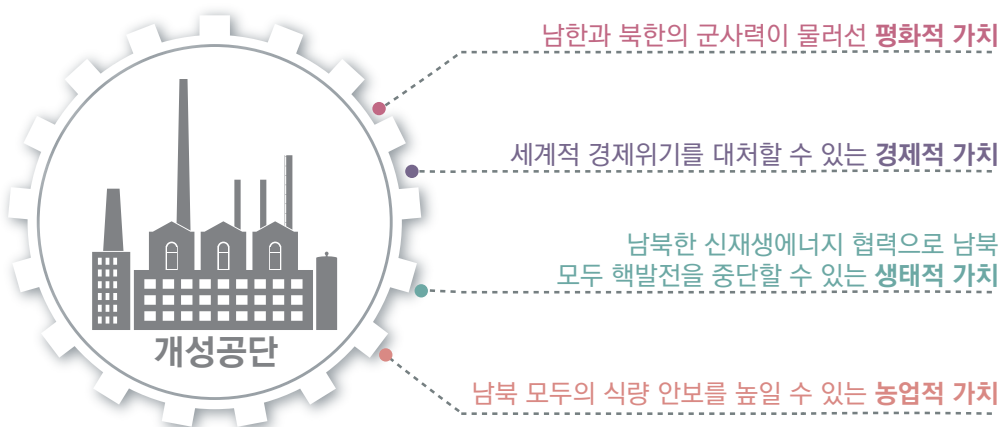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공약 39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 배치 반대

-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설치된다면 반드시 폐지한다.
-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형태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한반도 배치에도 반대

공약 40 개성공단 재개

- 폐쇄된 개성공단의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
- 개성공단 협력사업이 남북 당국의 정치적 · 군사적 목적에 의해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강화
- 남북 에너지 평화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생산시설 기지로 활용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을 확대하여 남북 모두의 식량안보를 높이고 한국의 농업정책에 기여한다.



공약 41 북핵 폐기 및 한반도 평화협정의 일괄타결

- 북핵에 명확히 반대하며,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일괄 타결함
-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남북공동 어로구역으로 설정하여 긴장을 완화
-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남북이 공동관리

동아시아 평화주도국 한국

공약 42 전시 성폭력에 대한 국가차원의 사과와 배상

-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협상 무효화와 제대로 된 협상.
일본 정부와 일본군에 의한 조직적 범죄임을 인정하는 일본 정부의 진실한 사과,
국가 차원의 책임 인정과 이에 상응하는 법적인 배상을 받아야 한다.
-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성범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사과와 배상
- 침략전쟁과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과 화해를 위한 동아시아 진실연구위원회 구성

공약 43 평화 위협하는 맹목적 한미일 군사동맹 탈피

-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의 폐기
- 을지프리트덤가디언(UFG)과 같은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군사훈련 중단
- 중장기적으로 제주 강정 해군기지를 폐쇄하고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조성

공약 44 동아시아 평화 주도

-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여 재원을 평화복지국가 건설에 쓴다.
- 평화유지군(PKO) 활동 이외의 국군 해외파견을 금지한다.
- 확산탄, 대인지뢰 등 비인도적 무기의 수출을 금지하고 생산을 엄격히 제한한다.

사회복무제 도입과 군 인권 개선 등

공약 45 사회복무제 실시

-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한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사회복무제를 실시한다.

공약 46 군사문화를 없애고 군 인권을 개선

- 어린이 · 청소년에 대한 병영문화체험 등 군사교육을 금지
- 군대 내 폭력과 강압 등을 없애기 위해 군인권기본법 제정



의료서비스 질 제고와 공공성 강화

공약 47 보건의료자원 및 서비스 기획 담당 조직 신설

- 보건복지부 내에 의료 서비스 필요량 지역별 추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에 관한 종합관리(health planning) 담당부서 신설
-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양, 규모, 지리적 분포, 서비스 내용, 질적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관리, 병원 신·증축, 통합, 고가장비 도입을 규제하고 관리

공약 48 공공병상 비율을 30%로

- 소수 대학병원과 다수 중소병원으로 이분화된 현행 구조를 거점별로 1000병상 내외 지역 거점병원을 신설하고 통합을 유도
- 이를 통해 12% 수준 공공병상 비율을 30% 수준으로 올림

공약 49 의료민영화 중단

- 의료 민영화를 가속시킬 국제의료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지
-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원격진료 허용 등 의료민영화 진행상황을 중단하고 규제완화 진행 이전으로 원상회복한다.

공약 50 건강보험 보장성 85%로

- OECD 꼴찌 수준의 국고지원을 늘리고 공공재원(국고지원 + 건강보험)의 비중을 75% 수준으로 향상
-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지역별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사이, 직장 가입자 내부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
- 공공재원 비중 확대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3%에서 85%로 향상

교육 공공성 강화

공약 51 공영형 사립대학 설립과 국·공립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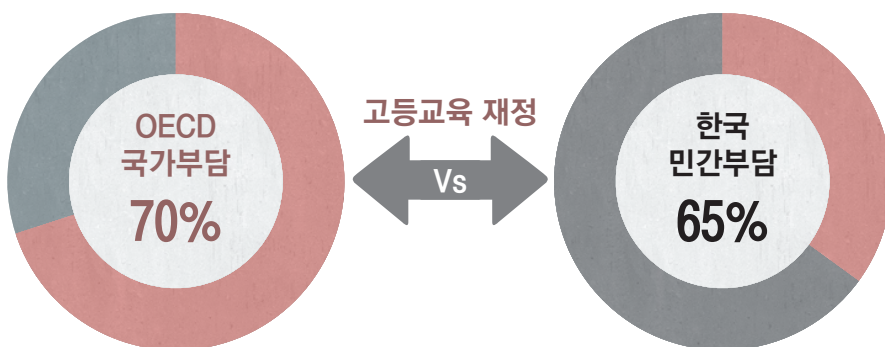
- 사립대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려 대학 인건비의 절대액을 재정 지원해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
- 사립대 학교법인이 아니라 학생을 포함한 대학 구성원과 정부 임명 이사들로 구성되는 대학운영위원회가 공영형 사립대의 인사와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한 행사
- 이를 위해 '사립고등교육기관의 구조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해 국가책임교수제, 등록금 무상화, 국공립대학과의 통합 지원, 전문대학의 공교육 강화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
- 시간강사의 정규직 교수화 적극 추진

공약 52 대학등록금 무상화

- 공영형 사립대학과 국공립 대학의 등록금을 무료로 한다.

공약 53 고등학교 교육 무상화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일체의 학비를 폐지하고 2017년부터 전면 무상화 한다.



민영화 & 규제완화 중단

공약 54 의료·철도·상수도·전력·가스·금융 등 공공서비스 분야 영리화 중단

〈진행 중인 공공서비스 분야 영리화 현황〉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허용, 의료법인 영리부대사업 범위 확대,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원격진료 허용, 국제의료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수서발 KTX노선 자회사 설립, 4개 일반노선을 민간운송회사에 개방, 적자노선 중심 최소보조금 입찰제를 통해 민간운영자 선정, 철도유지보수 자회사 분할 등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상수도 사업을 진행할 경우 민자 방식일 경우에만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해 민자사업 독려



발전 부문 6개 자회사로 분할과 시장형 공기업 지정, 재벌기업들의 민자발전 적극 참여와 특혜, 사기업에게만 복합화력 허용 등



개인질병정보의 민간 수집과 집중 허용,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완화, 정보인권 침해 방지책 없는 빅데이터(big data) 산업 육성 등

공약 55 공공규제강화위원회 설립 및 규제완화영향평가제 실시

- 규제완화만을 주요 업무로 하는 현행 규제개혁위원회 폐지
- 공공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업무로 하는 공공규제강화위원회 설립
- 규제완화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평가하여 공공성을 훼손하는 규제완화는 억제하는 규제완화영향평가제 도입

금융 공공성 강화

공약 56 외국환거래세 도입

- 외화의 원화매입거래에 0.03% 외국환거래세(일명 토빈세) 부과
- 외국인의 만기 5년 이하 채권 투자에 대해 환전시 6% 세율로 채권세 부과

공약 57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금융상품에 투자 위험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고, 등급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도입
- 금융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판매장소를 구별하고, 상품 판매인에 대한 면허제도 도입
- 금융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약 58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 금융회사와의 유착으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못하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 기구에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인사의 위원 참여 보장

작업장 및 먹을거리 안전 강화

공약 5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자 및 기업에게 위험방지 의무 부과
- 의무 위반 현장 책임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
- 책임 기업의 벌금을 대폭 강화
- 책임 있는 공무원도 처벌

공약 60 작업장 위험성에 대한 알권리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작업장의 위험물질이나 위험시설을 비공개하는 관행을 없애고 노동자의 알권리를 강화
- 실효성 없는 작업중지요청권 대신 작업중지권 도입

공약 61 GMO 표시제 강화

- DNA나 단백질 잔존여부에 관계없이 GMO 원료 사용한 모든 식품과 사료에 GMO 표시 의무 부과
- GMO 가공식품 수입업체 명단 공개
- GMO 작물 개발 중단

공약 62 일본산 수산물 검역 강화

-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의 수입금지
-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

청년에게 월 100만원의 보장소득을

공약 63 대학등록금 등 무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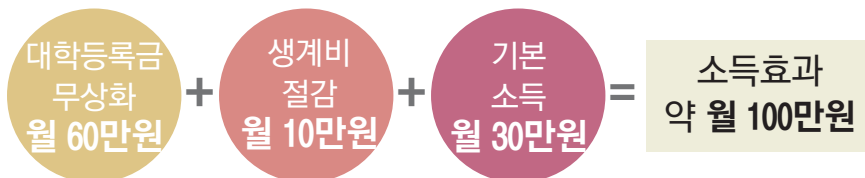
-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고 국·공립대학과의 통합 유도
- 공영형 사립대와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무상화
- 고등학교 교육비 2017년부터 전면 무상화

공약 64 청년부채 탕감

- 학자금 대출 연체자 부채 100% 면제
- 대학등록금 무상화와 함께 기존 학자금대출 원금을 소득기준에 따라 30~60% 수준으로 일괄 감면
- 취업 전 모든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면제

공약 65 청년 생계비 절감

- **주거비↓** : 공공임대주택 30% 청년 할당과 전월세 전환율 상한제
- **통신비↓** : 기본요금 폐지, 전국 주요 시내에 7만개 무료 와이파이 설비 설치
- **교통비↓** : 버스 월정액카드로 교통비 50% 절약



청년 일자리 문제, 근본적 해결을

공약 66 노동시간 단축만이 청년실업의 근본적 해법

- 노동시간 주 35시간 + 연장근로 5시간 상한제로 약 235만 개의 일자리 창출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를 정규직 고용 의무화
- 기간제법, 파견제법 등 비정규 악법을 폐지
- 3개월 평균 주당 35시간 노동했으면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

공약 67 청년 알바 보호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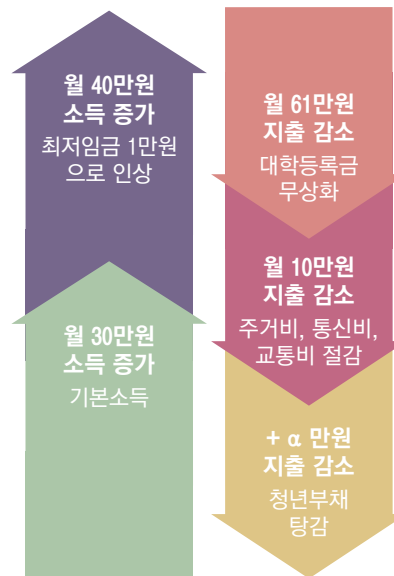
- 2017년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예 주 5일 하루 4시간 알바 청년의 월수입은 63만원에서 104만원으로 40만원 증가

-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최저임금 위반 등 철저히 감독

하루 4시간 알바하는 대학생에게
노동당 정책이 실현된다면?

지출은 월 71만원 + α 줄고
소득은 월 70만원 + α 늘고



학생인권 향상과 교육불평등 해소

공약 68 학생인권법 제정

- 학생인권조례로 해결할 수 없는 기본적인 학생인권을 국제법 수준에서 규정할 필요성
-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 관리자 등 모든 교육주체들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해 구제, 회복과 치유를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
- 초중고교생 대상 학원의 일요일과 공휴일 휴무제 의무화

공약 69 학습시간과 부담 줄이기

- 학습일 법정 시행일수를 현행 190일 이상에서 180일 이상 185일 이하로 단축한다.(초중등교육법 개정)
- 야간자율학습, 주말 중 자율보충학습 등을 금지
- 수업시수의 상한선을 명시하여 주당 30시간 이하의 수업만 이뤄지도록 한다.
- 장시간 학습 강요를 아동학대로 보고 처벌한다.

공약 70 교육불평등 해소

-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등 특수목적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등학교로 전환
- 고교 평준화 지역 확대
- 국회가 2017년부터 유보통합 추진

유보통합이란? 영아 교육시설(유치원)은 유아교육법, 보육서비스(어린이집)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운영과 관리가 이뤄지고 각각 교육부·교육청,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가 주무부서이다 보니 교육 및 보육 여건의 불평등, 정책과 재정의 혼선, 학부모들의 불편과 혼란 등이 문제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유보통합을 내세웠지만 3년 동안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교육의 자율성 확대

공약 71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및 획일적 교육의 개혁

- 역사교과서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국정교과서를 법률로 금지(교육기본법 개정)
- 교육감, 교원에게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 보장 강화
-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초·중등교육법 개정)

공약 72 교육부 폐지 등 교육자치 강화

-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해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정부조직법 개정)
- 교육부문 국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이 권한을 교육감협의회에 이양
- 국공립대 총장 직선제 보장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도적 변화

공약 73 '양성' 평등이 아니라 '성' 평등

-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 성평등기본법의 총칙, 기본계획에 성별권력관계와 성별이분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 폭력, 배제, 불평등이 없는 성평등사회의 수립 목적을 분명히 한다.

세상에는 여성과 남성 뿐 아니라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있습니다. '양성' 평등기본법은 생물학적 성별(sex)만 강조하고 남성중심적 가부장주의나 이성애주의 같은 성별권력관계, 성별이분법의 문제를 드러 내지 못합니다.

공약 74 성평등한 정책 집행을 위한 '성주류화전략지원센터' 설치

- 지역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성주류화전략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각각의 분석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 성주류화 민관협력체계 구축·강화 및 젠더거버넌스 의무화

성주류화 정책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별분리통계 등을 활용하여 정부의 일반 정책과 예산이 성평등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분석, 평가, 개선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각 제도의 운영이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공약 75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 강화

-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완전비례대표제로 전환, 교호순번제를 통해 여성의 정치대표성 50% 달성
- 관리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의 여성 목표제를 도입하여 30%까지 단계적으로 대표성 제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영방송 이사에 여성 30% 할당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돌봄 참여



공약 76 엄마 아빠 평등한 돌봄 참여를 위한 제도 개혁

- 여성이 일, 가족 이중부담을 지게 되는 불평등한 성별분업 반대, 노동시간 단축으로 맞벌이, 맞돌봄이 가능한 환경 조성
- 성별직종분리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
- 가사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허가 규정)가 아니라 ‘써야 한다’(의무 규정)로 개정하고, 육아휴직 의무 대상을 ‘엄마와 아빠’ 모두로 법률에 명시
- 동성결혼 및 생활동반자관계등록의 법제화를 전제로 혈연 가족 외 유급돌봄 휴직 자격 확대
- 육아휴직 급여액을 24주간 통상임금의 100%(현행 40%), 24주 초과 기간 60%로 늘리고 상한액도 200만원으로 인상(현행 10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를 2주일로 확대하고 유급화
- 가족돌봄휴직 유급화

공약 77 아동돌봄수당 지급 등

- 2020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현재 5.7%)을 전체 어린이집의 50% 이상으로 확대
- 복잡한 체계로 이뤄진 현재의 보육재정체계를 단일화하고,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만 0~5세 완전 무상보육 실시
- 보편적 기본소득 월 30만원 지급
- 이에 추가하여, 육아휴직 중이거나 전업으로 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부나 모에게 월 20만원, 한부모 가족의 경우 월 30만원의 아동돌봄수당 지급

여성 몸의 건강한 자율성을 위하여

공약 78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 보장

- 사회적, 경제적, 개인적 이유로 인한 임신중절권 보장
- 안전한 분만 인프라 구축
- 미용성형 의료 및 산업 규제, 과도한 의료 상품화 규제
- 월 1회 생리공결제 의무화 및 생리대 무상 제공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사회

공약 79 전시 성범죄 및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과 사과

-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하고,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차원의 사과와 배상 요구
- 베트남전쟁에서의 한국군 성범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사과와 배상
-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약 80 여성폭력 범죄의 올바른 사법처리를 위한 관련 법 제 · 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 마련, 성적 촬영물 유포 협박 및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사이트에 대한 처벌 법제화
-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 조항 개정
-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포괄하는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성매매를 성착취 범죄로 간주하여 성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성매매여성은 처벌하지 않도록 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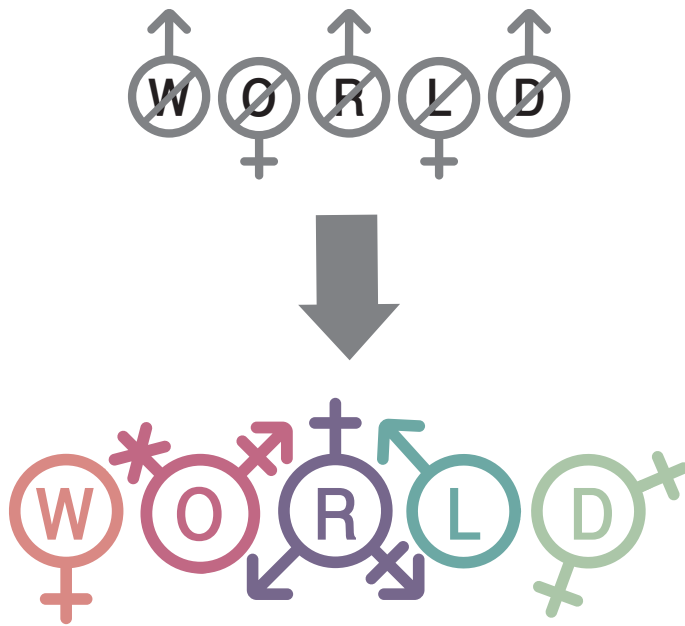
공약 81 피해자 지원 강화와 사회문화적 인식 제고

- 피해자 개인정보와 시설이용 이력이 집적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을 중지하고, 피해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독자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 피해자 지원예산을 여성가족부 일반예산으로 편입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지원예산 확대와 피해자 지원 강화
- 여성 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통합적 시스템 구축
-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 폐지. 성인지적 인권감수성과 성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실시, 여성폭력예방교육·성교육 강사 및 교육의무대상기관 관리·감독 내실화, 중앙정부 차원의 공익광고 제작 등 적극적인 캠페인 실시

공약 82 대상별 지원 강화

- **노인여성** :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과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별도의 노후수당 신설
- **이주여성** : 법적 거주권 강화, 가정폭력 귀책사유에 정신적·언어적 폭력도 적용,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종차별금지 규정을 차별금지법에 포함. E6-2 비자 여성노동자들의 성매매 착취 및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 및 '국제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체계 마련
- **북한이탈여성** : 트라우마 치유 상담서비스 시행, 제3국 출생 자녀의 법적 지위 보장하는 법률 개정
- **장애여성** : 성인지적·장애인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장애여성기본법 제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 내 장애여성 고용할당 50% 준수, 장애여성 임신·출산 지원,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조항에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삭제
- **한부모 여성** : 양육비 이행강조 조항을 강화하고 국가의 선지급 제도 도입, 공공일자리에서 한부모 여성 우선 채용, 육아휴직 중 아동돌봄수당을 30만원 증액 지급, 비혼부의 양육비 선지급 의무 강화
- **농민여성** : 농민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이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가사, 간병서비스 농촌 할당제 도입, 밭작물 직불제 지급 강화
- **청소년 한부모** : 출산 및 양육 관련 자기결정권 보장, 양육지원 및 자립지원 대책의 구축 등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인정하는 사회



공약 83 다양한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대한 법적 차별 금지

- 동성애를 범죄화하고 군인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군형법의 제92조의 추행죄 조항 폐지
-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혐오표현금지법 제정
- 주민등록법의 성별 구분 폐지
- 국가사무에서 성별 등록은 인터섹스/간성을 포함하여 범주를 다양화하고, 성별정정은 법원의 판결 없이 관공서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개선
- 성평등교육법을 제정해 교육과정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권교육 항목을 넣는다.

공약 84 누구나 가족이 될 수 있는 권리체계 확립

- 동성혼을 법제화해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혼인권 보장
- 법률상 비혼 이성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비혼 동성배우자에게도 적용
- 생활동반자관계등록(시민결합) 법제화로 혼인과 무관한 가족 구성 권리를 인정
- 건강가족법을 개정해 재산상속, 건강보험, 조세혜택 등에서 '4인 정상가족'과의 차별을 없앤다.

성 소수자에 대한 복지 강화

공약 85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 및 성소수자를 배제하지 않는
보편적인 사회 디자인

- 트랜스젠더 성별전환 과정 중 의료적 조치에 건강보험 적용 및 의료비 지원제도 마련
- 수형시설 등에서 트랜스젠더, 인터섹스가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 있을 권리를 보장하고
성소수자 수용을 위한 독립적인 성별중립 공간 확보를 제도화
- 장기적으로 공공기관부터 모든 화장실의 1인 화장실로의 개보수를 추진

장애인 노동권과 이동권 보장



누군가가 밀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모습에서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으로

2014년 7월 25일, 46년 동안 유지되었던 뉴욕시 장애인 마크가 변경되었다.

- 앞을 향해 나가려는 몸체
- 스스로 휠체어를 있는 힘껏 잡으려는 팔

공약 86 장애인 노동권 보장

-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저하를 이유로 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폐지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액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단계적 축소와 지급제한 조치를 폐지한다.
-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시간을 현행 월 100시간 이내에서 월 180시간 이상으로 늘리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원고용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국가적 인프라 구축
-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 민간기업 2.7%에서 3%로, 정부기관 3%에서 5%로, 의무고용의 50% 이상은 중증장애인으로

공약 87 장애인 이동권 보장

- 2021년까지 저상버스 법정기준대수 도입(폐차로 새로 도입되는 버스는 모두 저상버스로 도입)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해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고, 시외버스 · 고속버스 · 마을버스 등에도 저상버스 도입 근거를 명시
-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정의를 휠체어탑승장비가 설치된 차량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로 규정된 특별교통수단의 대수를 100명당 1대로 개정
- 기초단체 차원에서만 시행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을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장애인 자립 지원

공약 88 장애인 활동지원 강화

- 장애등급에 의한 활동지원서비스 자격제한과 서비스 상한제한을 폐지하고 예산을 확대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서비스 제공
- 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폐지
- 활동보조인, 노인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정규직화

공약 89 장애등급제 폐지와 소득보장 강화

-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재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등급하락 피해자들의 구제대책 마련
- 소득보장방식에서 장애등급과 가구소득기준을 폐지하고 개별소득 기준으로 전환
- 기본소득 월 30만원 이외에 장애인에게는 추가 기본소득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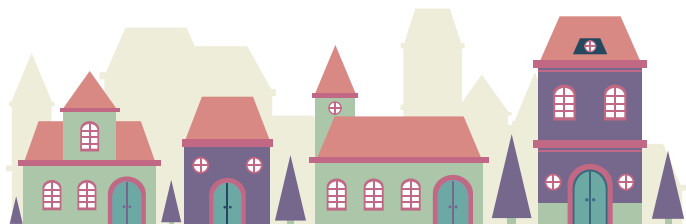
공약 90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체계 마련

- 자립생활을 지원하지 못하는 장애인복지법을 폐기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
- 장애인거주시설을 전면 폐지 및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과 시행
- 자생적 수준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공적이고 체계적인 수준의 지원체계 마련

지역을 ‘문화사회’의 거점으로

공약 91 지역예술센터와 도서관을 문화사회 거점으로 활용

- 주민자치센터와 문화회관 등 공공시설을 공연장 + 전시장 + 상영관 + 작업실 + 교육 기능을 하는 대중예술센터로 활용
- 예술센터를 문화예술 전문가, 지역예술인, 시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시민문화네트워크가 운영
- 문화예술 체험과 교육에 머물고 있는 지역예술센터의 기능을 실질적인 예술가 양성과 활동 지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행정 시스템 일원화
- 지역예술센터에 실시하는 교육, 전시, 상영, 공연 등 무상화
- 문화회관 등 지역문화센터에 해당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전시, 공연, 상영 등 쿼터제 실시하고, 아티스트 피(Artist Fee) 지급. 단, 각 지역 신진 문화예술인 발굴 및 성장 지원 통해서 지역 문화예술권력 독점 방지
- 문화소외지역에 유휴 공간 활용 문화센터 설립하고 활동가 파견 및 지원
- 음반과 영상물을 보유한 공공미디어도서관을 시도 단위마다 설치.
- 각급 도서관 및 각급 학교 정규직 사서교사 1인 이상 고용 의무화하고 공공미디어도서관 운영에 전문인력 고용



독립 창작자가 주도하는 문화예술

공약 92 독립예술지원특별법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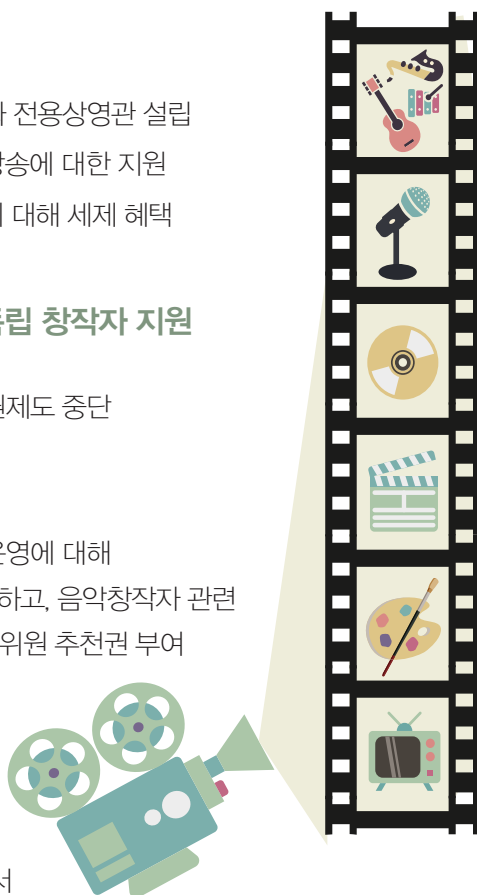
- 멀티플렉스 독립영화 쿼터제 시행과 거점별 독립영화 전용상영관 설립
- 독립예술 쿼터제를 시행하는 공연장, 갤러리, 극장, 방송에 대한 지원
- 예술공간의 임대인, 레코딩 스튜디오와 중소공연장에 대해 세제 혜택

공약 93 상업문화에 대한 공적 지원 중단과 독립 창작자 지원

- 문화예술자본이 주도하는 상업문화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 중단
- 음원시장에서 1개 서비스업체가 전체 시장의 33%를 점유할 수 없도록 한다.
- 문화체육부장관이 음악창작자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음악창작자 관련 단체에 저작권법상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 (음악산업진흥법 개정)

공약 94 문화예술인의 노동권 보장

- 문화예술인에 4대보험을 적용하고 문화예술 작업에서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 공연예술행사를 위한 공연기획사 선정에서 표준계약서 미작성시 처벌 규정 마련
- 예술강사의 사용자를 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명확히 하여 노동법 적용, 강사로 현실화 및 휴업 수당과 유급휴일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보장. 최소 2년 계약후 무기계약직 전환 보장



실질적 지방자치의 토대 마련

공약 95 지방재정 독립성 강화

- 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기본복지에 대해 국고보조금제도를 폐지하고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일원화(정부재정법 개정)
- 취득세 인하조치 원상회복(2013년 말 개정 이전으로, 즉 6억 원 이하 주택 2%, 9억원 초과 주택 4%로 회복)

자치는 직접민주주의로부터

공약 96 주민참여예산제 실질화

- 주민예산참여의 법적 위상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의 근거법으로 주민참여기본법 제정
- 주민에게 지자체 전체 예산 편성에 대해 참여 권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견 제출 권한, 예산 편성 전체 과정에 대한 공개 권한 부여

공약 97 지방자치단체 직접민주주의 강화

- **주민투표제 개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주민투표 실시요청권 삭제,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주민투표권자의 1~5% 서명으로 완화, 주민투표 선거공영제 실시
- **주민소환제 개선** : 주민소환대상자에 교육감과 지자체 비례대표 의원을 추가, 공무원의 주민소환 운동 방해나 개입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주민소환 투표결과 미공개 기준을 폐지하고 투표율에 관계없이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조례에 대한 개입 금지

재벌·대기업의 문어발 확장 규제

공약 98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등의 규제

- 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 대형마트 등이 인근 소규모 점포에 미치는 영향이 매출 10% 이상 하락일 경우 설립을 허가하지 않는다.
- 재래시장 등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는 준대규모점포도 불허
- 체인화편의점, 드럭스토어, 상품공급점 등의 변종 SSM과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규모점포와 동일한 규제 적용
- 대형마트 등에 대한 유통법상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규제를 강행규정으로 전환
- 의무휴업일을 월 4회 공휴일로 하고 오후 8시~오전 11시에 영업을 금지
- 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 비개방 품목 7개와 순대, 떡볶이, 치킨 등 중소기업형 조리식품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서 판매 금지

비개방 7개 분야란? 1996년 유통시장 개방 당시 개방하지 않는 품목에 해당하는 유제품 및 계란, 육류 및 육류 제품, 빵 및 제과, 사탕류, 캔 음료, 담배, 기타 식품

공약 99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중소상인 보호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적합업종을 지정
- 대기업이 적합업종에 진출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대기업의 승인 없는 적합업종 진출은 형사 제재한다.
- 이미 적합업종에 진출한 대기업은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이양을 권고하고 불이행시 형사 제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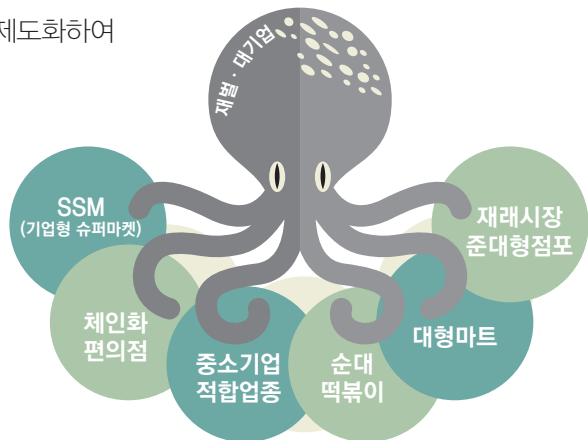
중소상공인의 제도적 지위 강화

공약 100 중소기업의 집단적 대응력 강화

- 중소기업이 공동납품, 공동구매, 공동연구 등을 할 경우 부당공동행위(담합) 제재를 받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 가맹점의 단결권, 단체교섭요구권을 대리점, 대규모점포 입점업체와 납품업체 등에 확대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단체행동권도 부여
-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 관련법에 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를 전면 확대 도입

공약 101 상가임대차 임차인 보호 강화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제외 규정 삭제
-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환산보증금 기준과 무관하게 모든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인상 상한제 적용
- 권리금 보호 관련 건물주가 18개월간 비영리 목적으로 건물 사용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의무가 면책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에도 권리금 보호 적용
- 시군구별로 지자체, 임대인, 임차인,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제도화하여 임대료 인상, 권리금 산정, 권리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한 분쟁을 조정



생태적 소농 보호 육성

공약 102 친환경 직접지불금 확대와 귀농 직불금 신설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을 3,000억원으로 확대(2015년 예산 508억원)
- 귀농가구에 대해 3년 동안 연 600만원 상당의 귀농 직불금 지원
- 2015년 현재 1ha당 25~40만원의 발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를 인상 현실화

공약 103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 정부 차원의 계획을 통해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에서 로컬푸드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인센티브 부여로 로컬푸드 사용량에 대한 목표치 설정해 관리
- 지방정부에 항목별 매칭 방식 예산지원을 폐기하고 포괄적인 보조금을 지급해 자율적 로컬푸드 정책 수립을 유도
- 생산자-소비자 공동체 형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규모 농업인 조직화 의무를 부과(농산물직거래 활성화법 개정)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로컬푸드 무상급식을 도입하고 이를 학교급식법에 규정



공약 104 농민에게 추가 20만원 기본소득 지급

-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에 추가하여 농민에게는 20만원의 추가 기본소득 지급
- 실제 농업종사자에 대해 지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농업노동자를 포함하여 실제로 연중 6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중 만 19세 이상 인구에 대해 지급

농업 경제정책

공약 105 식량자급률 목표 50% 설정

- 2040년까지 식량자급률 50% 달성 목표 설정
-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실시
- 북한에 대한 쌀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인도적 쌀 지원을 확대하고 쌀 재고량 소비 촉진
- 밥쌀용 쌀수입 중단 : 저관세할당물량(TRQ) 의무수입물량을 밥쌀용 쌀을 제외한 가공용으로 충당하여 밥쌀용 쌀 수입은 중단

공약 106 농지 유지 및 확대

-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 ‘농업공간운용위원회’ 설치하고, 농지의 타용도 전용을 막기 위해 각종 도시계획의 승인권, 1년 이상 휴경지에 대한 임차인 선정권 등을 부여한다.
- 농지임대차 국가관리제도를 도입해 농지임대차 기간을 최소 9년으로 하고, 임차인에게 농지 개선 의무를 부과, 임차인은 농업공간운용위원회의 경작허가를 받아 경작을 하고 임차료는 농지 소유자가 아니라 농업공간운용위원회가 농업평균수입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노동당 정책공약집

발행처 노동당

발행일 2016년 3월

주소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전화 02-6004-2000

팩스 02-6004-2001

이메일 laborkr@gmail.com

값 500원

